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92호  
2021.2.1

## 정책동향

▮ 2021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시장동향

▮ 지난해 건설투자 0.1% 감소, 3년 연속 침체

▮ 세계 경제 전망과 잠재 리스크

## 산업정보

▮ Smart ODA, 해외개발원조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설논단

▮ 신뢰 그리고 정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2021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민간·공공투자, 주택공급 확대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 예고 -

### 2021년도 정부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sup>1)</sup>

-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9%(45.7조원) 증액한 558.0조원으로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예고함.
  - SOC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2021.6월까지 집행률 63% 목표)하고, 지자체도 상반기 60%를 목표로 진행함. 지자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과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함.
  - \* 성립전 예산 :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 방법으로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 예를 들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편성.

<표 1> 2021년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2020			2021(잠정)*		
	연간계획	상반기		연간계획	상반기	
		계획	집행목표		계획	집행목표
관리 대상 사업	305.5	189.3	62.0	341.8	215.3	63.0
일자리 사업	11.9	7.9	66.0	13.6	9.1	67.0
SOC 사업	46.7	28.2	60.5	46.2	28.6	62.0
생활 SOC 사업	10.5	6.8	65.0	11.0	7.2	65.5

주 : \* 2021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집행 규모는 2020년도 이월액 등을 추가 반영하여 2월 중 확정 예정임.

### 기업투자 · 민간투자 · 공공투자 · 해외건설 확대

- 기업투자 · 민간투자 · 공공투자 등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수주 지원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
  - 2021년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함. 또,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추진으로 내수를 보강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 기업투자의 경우 주민 · 사업자 · 지자체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기발굴 과제는 2021년 내 10조원 이상 착공을 지원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중 건설산업 관련 부문을 발췌·정리함.

- 신규 발굴 후보(예시) : 석유화학공장 증설, LNG 저장시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등
- 기발굴 과제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고양콘텐츠 파크(1.8조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6조원) 등
- 민간투자사업은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신규사업 발굴 TF’ 등을 통한 그린스마트 스쿨과 같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등을 추진함.
  - 추진협의회 : 재정관리관(팀장), 관계부처 국·과장, 시·도실장, PIMAC 등 전문기관
  - 민자사업 (기존 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등 (새로운 유형) 그린 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 공공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상반기 내 53% 조기 집행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신재생 에너지 건설 등) 등에 중점 투자함.
  - 주거안정 지원 26.4조원, 한국판 뉴딜 3.4조원, 안전 강화 5.8조원 등
  -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와 같은 정책형 뉴딜펀드(2021년 4조원 목표)를 조성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함.
- 해외수주 300억 달러 초과 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 등의 지원을 하고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함.
  - 2조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는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1.5조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0.4조원으로 구성됨.

## ■ 주택·부동산 정책

- 주택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을 추진함.
  -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과정에 가속화 노력을 기울이고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함.
    - \* 공공 재개발 사업지 선정(2021.1월 중), 공실 임대주택 입주 개시(2021.2.26) 등
  - 추진 중인 투기 수요 차단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추가 유입 완화를 위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권’ 유인을 제고함.
    - \* 법인·다주택자 증부세 및 양도세 강화 적용(2021.6.1)

박용석(선임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 지난해 건설투자 0.1% 감소, 3년 연속 침체

- 4/4분기 2.5% 감소, 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SOC 부양책 집중해야 -

### 2020년 4/4분기 건설투자 2.5% 감소, 연초 회복세 이어가지 못하고 3분기 연속 위축

-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국민소득 속보치에 의하면, 2020년 4/4분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는 정부 투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지난 2019년 4/4분기와 2020년 1/4분기에 각각 2.6%, 4.2% 증가함. 2분기 연속 증가해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2/4분기에 0.1% 감소하고 3/4분기에 1.0% 감소해 다시 위축되었으며, 4/4분기에도 2.5% 감소해 침체가 더욱 심화됨.
  - 연초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일부 조정했기 때문임.

### 2020년 연간 건설투자, 전년 대비 0.1% 감소, 3년 연속 감소

- 결국, 2020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해 2018년(-4.6%)과 2019년(-2.5%)에 이어 3년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주거용 건축투자가 지난 2020년 1/4분기 4.0% 감소하고 2/4분기에 6.9% 감소함, 비록 3/4분기에 0.5% 증가해 소폭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 비주거용 건축의 경우 2/4분기 1.3% 감소하고 3/4분기에 4.6% 감소하였는데 4/4분기에도 위축되어 지난해 공종별로는 가장 침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토목건설의 경우 1/4분기 16.9%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점차 둔화되어 3/4분기 2.2% 증가에 그침.

<표 1> 2020년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2015년 실질 가격 기준)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 건설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 건설
1/4	54.5	19.7	18.5	16.3	4.2	-4.0	4.0	16.9
2/4	72.1	22.7	24.8	24.5	-0.1	-6.9	-1.3	8.6
3/4	65.2	23.0	24.4	17.8	-1.0	0.5	-4.6	2.2
4/4	70.8	-	-	-	-2.5	-	-	-
2020년	262.6	-	-	-	-0.1	-	-	-

자료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소득 속보치(2021년 1월 26일), 주 : 2015년 연쇄가격, 원계열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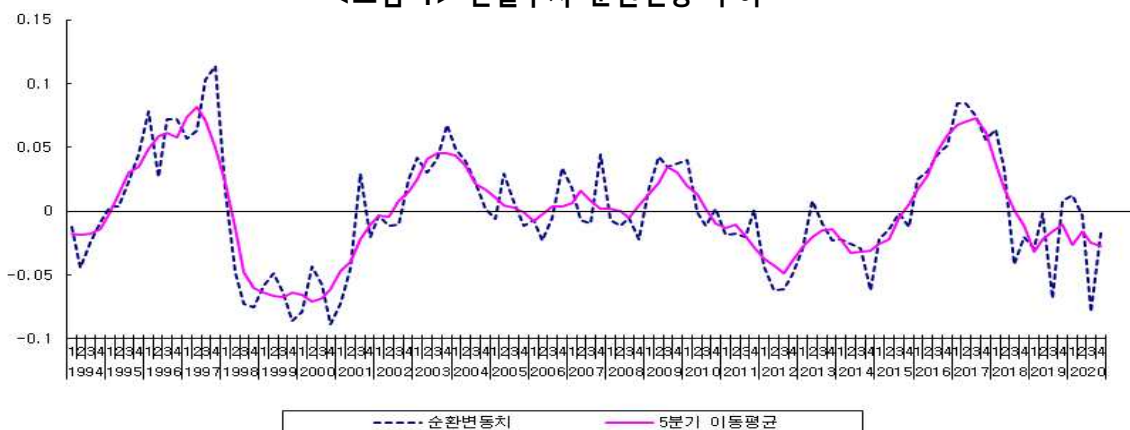
■ **건설투자 순환변동, 2020년 하반기 불황국면 지속, 향후 회복기 진입 예상**

- 건설투자 순환변동치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2018년 하반기 불황국면에 진입하였고 2020년 초에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침체함(<그림 1> 참조).
  - 순환변동치의 정점은 2017년 2/4~3/4분기 사이로 대략 5년 동안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1년 동안 후퇴기를 지나 2018년 하반기부터 불황국면으로 진입함.
  -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2019년 4/4~2020년 1/4분기에 건설투자가 인위적으로 반등하였지만, 이후 다시 위축된 모습을 보임.
- 한편, 건설경기는 2021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
  - 건설경기가 평균적으로 불황기 진입 후 저점을 형성하는 데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2020년 말에서 2021년 상반기 사이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좋지 않아, 회복 시점이 지연될 수도 있는바 향후 추이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음.

■ **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SOC 부양책 집중, 하반기에는 민간 회복 도모해야**

-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상반기에는 정부 SOC 공사를 통한 부양책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 하반기 민간부문의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2.4% 감소함. 외환위기로 힘들었던 1998년 이후 침체가 가장 심각했음.
  -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기에 접어든 건설투자를 활용해야 함. 상반기 SOC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하반기 민간투자 회복을 이끌 필요가 있음.

<그림 1> 건설투자 순환변동 추이



주 : 한국은행의 자료(건설투자 2015년 연세 가격 기준 계절 조정 계열)를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함.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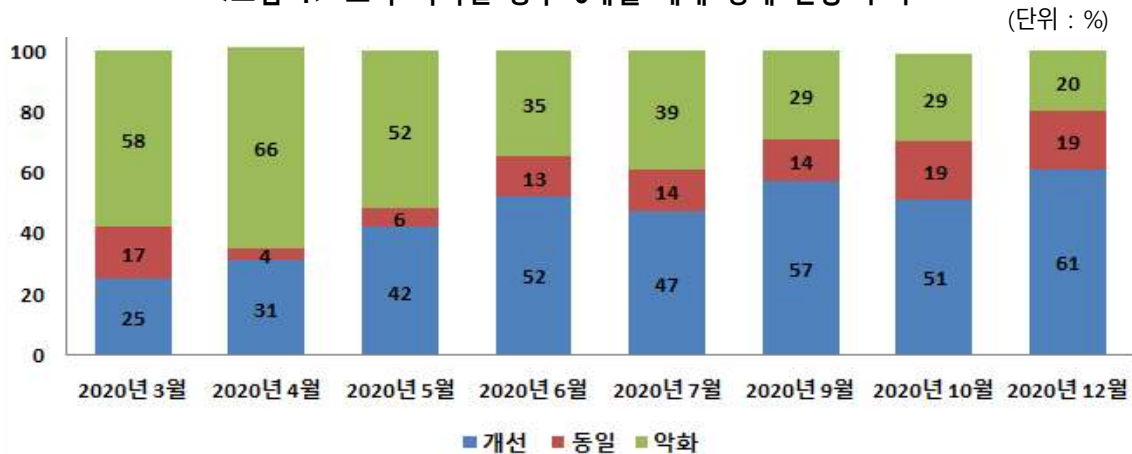
## 세계 경제 전망과 잠재 리스크

- 세계 경제 긍정적 전망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 ■ 향후 6개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지난 3월 이후 지속<sup>2)</sup>

- 코로나19의 대유행 직후인 3월, 25%에 그쳤던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비중은 이후 증가를 지속해 12월 조사에서는 61%까지 증가함.
-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4월 조사에서 6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월 조사에서는 20%까지 감소함.

<그림 1> 조사 시기별 향후 6개월 세계 경제 전망 추이



- 2021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OECD는 4.2%, 세계은행은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PwC는 4.7%를, JP모건은 5.0%를 제시하면서 긍정적 시나리오의 전개를 예상함.
- PwC는 맥킨지 분석과 유사하게 지역별 성장률 전망에서도 중국(8%)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함. 미국(3.5%), 영국(4.5%), 프랑스(6.0%) 등이 포함된 G7의 평균 성장률은 3.7%에 이르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6%를 상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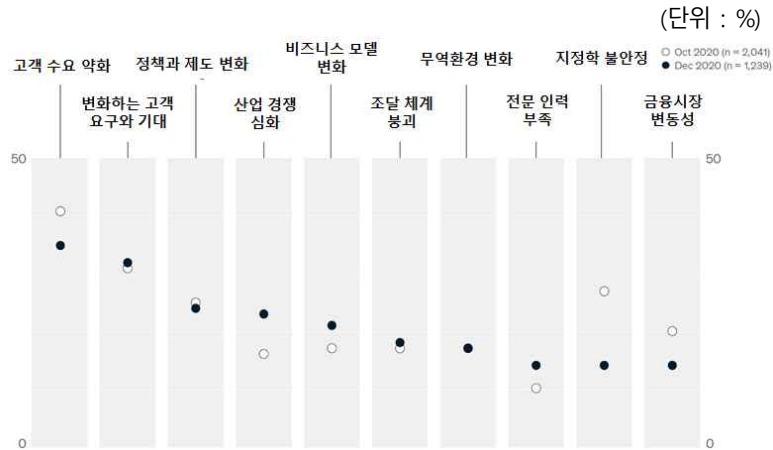
### ■ 고객 수요 약화와 고객 요구기대의 변화가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 1위와 2위 차지

- <그림 2>에서 보듯이 향후 12개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글로벌 기업은 '고객의 수요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McKinsey(2020), "Economic Conditions Snapshots, December 2020 : McKinsey Global Survey Results".

- '산업 경쟁 심화'는 지난 10월 조사에서 9번째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또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지난 조사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반면에, 지난 10월 조사에서 3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정학 불안정'은 이번 조사에는 낮은 응답률을 기록함.

<그림 2> 향후 12개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 경기 부양에 쓰인 정부 부채, 탄소제로 관련 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국제유가의 더딘 회복 등도 2021년에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됨.

###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 여전

- 2021년 세계 경제는 5%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 정부 부채 증가, 기후 변화 정책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WB, IMF, OECD 등이 발표하는 2021년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성공적인 백신 개발과 접종,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의 경기 부양이라는 전제가 있음.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은 2021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로 회복 속도와 폭은 차별화될 것임. 특히, 중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와 일본, 그리고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임.
-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은 발주 확대에 대비한 수주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로 인한 중동국가의 경기 부진은 타 국가에 비해 심각했지만, 원유 수요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Smart ODA, 해외개발원조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 개정의 시사점 -

###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 10주년

-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으로서 선진국의 경제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유일한 사례임.
- 2020년 5월 26일 전부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11월 27일 시행됨.
-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체계를 구축함.
  -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ODA의 통합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음.
    - ① 통합적 목표 및 전략 수립 과정의 개선 필요 :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에 대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연간 시행계획, 양자 간 개발원조를 위한 국가별 협력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등을 수립했으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전략 간 연계가 부족했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의견 체계적 수렴이 불충분함.
    - ② 사업심사 단계에서도 유상 및 무상원조 간 연계 미흡 :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수출입은행이 시행했던 반면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과 그 외 40여 단체가 시행함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원조사업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연계해 심사하고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③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시행기관이 현지 사무소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지 시민사회단체 혹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1차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위 기관의 평가 기능도 제한됨.
- 2020년 전부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조정권을 부여함.
  - 유·무상 개발원조 사업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함.



## Smart ODA,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개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 개정이 개발원조 체계를 개선한 시점에서 Smart ODA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발원조가 공여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되는 Selfish ODA, 사전 혹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수원국이나 공여국의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Good ODA, 제한된 원조 규모로 인해 수원국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Stupid ODA 등과 반대로 Smart ODA는 중장기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유용함.
  - 공여국의 핵심역량을 이용해 수원국의 수요를 타게팅하는 Smart ODA를 실행하려면 ① 다른 공여국이나 국제기구,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NGO 혹은 민간기구 등과 가치시슬을 구축하고, ② 공여국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등과 수원국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등의 클러스터를 연계해 적정기술, 교육 및 훈련, 자본 등을 교류하는 것 등이 필요함.

## 건설 관련 Smart ODA를 위한 방안

- 건설산업은 도로, 교량, 정수시설, 지하수 이용시설, 발전설비, 학교 건립 등의 활동을 통해 ODA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 우리나라의 2019년 ODA 실적을 지원 분야별로 구분하면 건설과 관련되는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시설, 국도건설, 전문대·대학교육, 철도운송, 농업개발 등이 모두 10위 내에 포함됨.
  - 요구액 기준의 2021년 ODA 계획에서도 교통, 보건, 교육, 농림수산 등의 비중이 높음.
- 지금까지 건설 관련 ODA 사업은 해당 지역의 발전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의 부재로, 사업의 결과로써 생산된 구조물을 유지·관리할 국내 혹은 해외나 현지 NGO 등과의 네트워킹이 결여되어 일회성 혹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건설 관련 ODA에서 Smart ODA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수원국의 특정 지역에 인프라시설을 구축할 경우, ① 현지 주민들에 의한 자체 사후 관리가 용이한 모델 개발, ② 해당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지역자치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이나 Koica 같은 ODA 시행기관은 ① 수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 원조사업을 확대하고, ②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계획, WHO, UNICEF 등 국제기구나 현지 지방자치단체, NGO 혹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혹은 국제 NGO 등과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 신뢰 그리고 정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백신의 미확보, 서울시장 등 재보선 선거 출마 후보의 자질 등 정치 세력의 공방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치 세력이 국민을 향해 끊임없는 구애(求愛)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를 모르는 듯하다. 그것이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국정 운영의 기교도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달변(達辯)도 아닌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국민과 같이 행동하는 비릇된 국민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신년 초 정부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의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 및 SH 공사와 함께 산업 및 주거시설로 바꿔 2022년까지 약 7천 가구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부지 내 주택 비율을 확대해 주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를 용자해주며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하향하는 등의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 장관이 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과는 달리 공급을 바탕으로 한 주거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국토부와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1월 12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25건 중 절반이 넘는 65건이 신고가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이 전국 0.25%, 서울 0.07% 상승을 발표하는 등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 상승에 대한 소식이 멈추지 않고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년이 넘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에도 국내 주요 도시 주택의 매매 및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

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당시 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를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민에게는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고위 공직자 22명 중 6명이 다주택자이며 3주택자도 2명이나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다주택자의 고위공직 임명을 두고 일어나는 정치권의 공방과 이들이 얻는 부동산 소득에 관한 뉴스를 지켜보던 무주택자와 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던 임대사업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정부의 주거 정책에 무관심한 시장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

중국 역사서인 사기에는 사목지신(徒木之信)이란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재상인 공손양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토지 및 세금 등을 개혁하는 법령을 만들었으나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법률의 공포 전에 성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이를 옮기는 자에게 큰 상금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금과 비교하면 너무 간단한 일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자 상금을 5배로 올린 후 결국 법에 맞게 포상했다는 이야기다. 아무 쓸모도 없는 법도 나라가 약속을 하면 지키며 법 앞에 성의가 없음을 알릴 때 활용되는 이야기로 국민을 바르게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인과 정책결정자가 눈여겨볼 대목인듯하다. <경기일보, 2021.1.17>